

## ‘불통의 지하방커’ 지역과 협력해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환골탈태’ 시급하다

### <2> 시스템 통한 문화협치를

국내 최대 융복합 문화기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이 출범 6년여 만에 다시 ‘변화’라는 파고에 직면했다. 문화전당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특별 개정안)에 따라 아시아문화원을 흡수·통합해 하나의 조직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또 다른 전환기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동안 제기되었던 이원화 체제로 인한 운영의 갈등, 콘텐츠 부실 등은 향후 통합을 계기로 안정적인 조직 구축과 더불어 전당 정상화·활성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 문화전당의 시스템 혁신을 전제로 한 문화협치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이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핵심 과제인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예술 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문화교류도시로서의 역량 및 위상 강화 등 4대 역점 과제의 성공적인 수행과 맞물려 있는 지점이다.

지역협력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당위성에 밀려 의례적인 방편으로 진행되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지금까지 문화전당은 ‘폐쇄적이며 불편한 공간’이라는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가 뒤따랐다. 외관상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공간적 특성도 한 이유지만 그보다 지역과의 협력과 소통의 관점에서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다.

지역에서는 문화전당을 ‘불통의 지하방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는 지역사회와 예술계, 시민사회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문화전당이 문화발전소라는 비전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역 관심과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소통부재 개선은 인식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을 통해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지역 한 예술인은 “문화전당이 광주라는 역사적 상징성을 지닌 도시에 있기 때문에 지역과 연대·소통은 필수”라며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 소통을 통해 세계적 흐름과 지역 콘텐츠가 연계돼 시너지 효과를 낳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과 창출이 수반되는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예를 들어

콘텐츠·전시·공연 등 문화사업  
광주 예술계·시민사회와 협력  
지역 문화인재 양성에도 나서야

지역 내 문화인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거나 문화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대학 등과 실질적인 공유를 매개로 성과를 견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기곤 광주전남연구원 지역공동체문화연구실장은 “사실상 지금까지는 기관 대 기관의 협력, 협력 창구를 위한 협력 창구의 형식적 성격이 강했지 실질적 성과가 수반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지 못했다”며 “5·18과 같은 주제 외에도 지역사회 주제와 범위, 주제 등을 넓혀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전당의 지역사회 협력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조직의 내부적인 리더십이 작동해야 향후 콘텐츠, 일자리 등 문화적 창출과도 연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사회나 예술인들도 문화전당에 비판과 문제제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문화콘텐츠 질을 높이고 문화역량을 높이는 것은 일차적으로 지역예술인들의 책임과 무관치 않기 때문이다.

물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추진체계상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이므로 시민사회, 예술인, 행정 등이 함께 소통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다. 지금까지는 이원화 체제로 문화전당이 정책과 교류 사업을, 아시아문화원이 콘텐츠 창작과 전시, 공연, 교육 등을 맡았다. 그나마 이전 정부에 비해 문제인 정부에 들어서는 민주평화교류센터 내 지역협력팀을 뒤 협력과 소통을 담당했지만 생각만큼 원활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지난 5월 41주년 5·18민중항쟁 기념행사 기간에 오월 정신을 ‘검열·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해 논란이 일었던 것은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단일한 태도도 원인이지만 지역과의 면밀한 소통과 신뢰의 부족에서 기인한 점도 크다.

이기훈 지역문화교류재단이사는 “문화전당의 설립 근거가 5월 정신의 상징인 옛 전남도청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콘텐츠 생산 등과 연계해 일정 부분 문화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며 “협력은 수사가 아닌 실천이 담보돼야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지법 난민 재판 들어가보니 ... ▶6면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철학자 강신주 ▶20면

신 팔도명물 - 제주 참조기의 계절이 왔다 ▶22면

## 雲 좋은 날 ... 눈부신 남도의 가을



지루한 가을장마가 물러나고 화창한 날씨를 보인 8일 광주 광산구 분량동 메타세쿼이아길과 청명한 하늘이 어우러져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광주 제4수원지 난개발 대책 마련되나

### 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여부 지역사회 의견 수렴 뒤 재검토

광주시가 무등산 제4수원지 관련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일단 시간을 두고 지역사회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해 무등산 훼손을 막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등도 고민하기로 했다.

염방열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4수원지를 상수원으로 하는 각화정수장을 폐쇄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수돗물 공급 차질과 난개발 우려 등은 없

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보호구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청취 등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염 본부장은 지난 5월 폐쇄를 결정한 각화정수장 기능 상실에 따른 보호구역 해제 여부와 관련해선 “정수장이 폐쇄돼 수원지의 상수원 기능이 상실되더라도, 상수원보호구역을 무조건 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충분히 시간을 두고 지역사회와 함께 해제 여부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중하게 고민하고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현재 광주시와 북구는 1981년 지정한 제4수원지 일대 9.7㎢의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행정 절차를 밟고 있으며, 지역 환경단체 등은 난개발

등을 우려해 보호구역 해제를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보호구역 해제시 일부 사유지(7만 2000평)가 (무등산) 국립공원으로 포함되지 않고 단독주택 신축 등이 가능한 보전 녹지로 풀리게 됨에 따라 각종 난개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염 본부장은 “보호구역을 해제해도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로 남게 돼 사실상 공원시설의 건축이 불가하다”며 “그나마 인근 마을 내 7000평 정도에서 단독주택 신축 등은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면적 등에서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 난개발이나 환경훼손 등이 발생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이낙연, ‘의원직 사퇴’ 배수진

### “모든 것 던져 정권 재창출”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8일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던졌다. 첫 지역 순회 경선지인 충청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과반을 내주며 더불어민주당 차이로 밀려난 이 전 대표가 1차 선거인단 투표와 호남지역 경선을 앞두고 배수진을 친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3면>

이 전 대표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호남권 대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정권재

창출에 나서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정권 재창출을 이름으로써 민주주의와 민주당, 대한민국과 호남 그리고 서울 중로에 제가 진 빚을 갚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강조하며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을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도덕적이지 않아도 좋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하냐”면서 “우리는 5·18영령 앞에, 세월호 아이들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으려 한다.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에 합당한 후보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지사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세금을 새로 만들어서 거둔 돈을 부자만 가난하건 똑같이 나누어 주자는 발상은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방해한다”며 “저는 신복지로 복지국가의 길을 더 탄탄히 가겠다.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제 정치인생을 걸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의 ‘의원직 사퇴’라는 승부수가 먹힐지는 미지수다. 이 전 대표가 전남 출신이라는 점에서 호남 민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지만 이미 경선에 진입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체적인 판을 흔들기는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네거티브 중단 선언과 같이 시기를 놓쳤다는 것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전라남도
교통안전서약운동

여러분의 운전습관과 보행습관은 안전한가요?

# 지금 바로 교통안전 서약운동에 참여해보세요!

QR코드를 촬영하시거나, 전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교통안전서약운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하는 **교통 안전 습관 10가지 항목** 체크하기

- 교통법규 준수하기
- 음주운전 근절 및 예방하기
- 제한속도 20% 감속하기
- 횡단보도에서 핸드폰 통화하지 않기
- 도시지역 제한속도 30~50km 이하로 운행하기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하기
- 급정차, 급출발 안하기
- 불법 주정차 안하기
- 횡단보도에서 멈춰서 살피고 건너기
- 빗길, 눈길, 내리막길 제한속도 30% 감속하기

**8~37H** 빨간불! 앞으로 노력하면 되요!

**4~6H** 노란불!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7개 이상** 녹색불! 교통안전인식이 높은 당신 앞으로도 유지해주세요!